

지상중계/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언론3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제주시갑 선거구

제2공항·N번방 근절 등 지역·시대 현안 놓고 치열한 격돌

한라일보와 제민일보·JIBS 등 도내 언론3사는 지난 31일 오후 JIBS 스튜디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마의 변> 주제 질문 <주제지정 상호토론> <공통질문> <후보 주도권 토론1> <반론 주도권 토론1> <후보 주도권 토론2> <반론 주도권 토론2> <후보별 마무리 발언 순으로 80분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미래통합당 장성철·정의당 고병수·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나와 제주4·3특별법과 N번방 근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공항 등 현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

▶ 출마의 변

송재호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또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론과 실무까지 경험했다. 여기에 풍성한 인맥까지 더해 모든 역량을 제주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장성철 후보는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제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제주에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졌다. 이 책임은 중앙정치만 바라본 제주의 국회의원 때문”이라며 “지금 이 끝난다 입이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제주경제를 살리겠다”고 피력했다.

박희수 후보는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아야 하고, 민생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원과 의장을 경험했다. 누구보다 서민들의 삶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4·3에 대한 배·보상을 약속하면서 100대 국정과제로 올렸다”며 “지금 절반 밖에 지나지 않았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4·3특별법 개정과 배·보상을 반드시 하겠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4·3에 대한 사실조사다. 정직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재호 “그간 갖춘 모든 역량 제주위해 쓰겠다”
장성철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 제주에서 심판”
고병수 “심폐소생술로 빈사상태 제주경제 소생”
박희수 “누구보다 지역·서민의 삶 잘 아는 후보”

고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아직 진상규명과 배·보상, 정명 찾기, 기억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 국회의원은 노력하겠다고 말해놓고, 당대표나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당의 무관심과 야당의 이념공세가 4·3특별법 발목을 잡는 원인”이라며 “저는 대학생때부터 도의원까지 실천으로 살아왔다. 국회

의원이 되면 반드시 특별법 개정을 이루겠다. 통과 못시키면 다음 국회 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주제 질문 - 'N번방'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송 후보는 “중대한 범죄다.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지시했다.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영국처럼 불법영상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아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죄악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모두 강력처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당시 통과를 시켰으면 이런 토론은 없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상호 토론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공방이 벌어졌다.

송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주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절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내용은 환경수도·평화수도로 가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도민 합의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듬어서 꾸준히 가야 한다”며 “다양한 산업구조와 경제상황 등 현 시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돈이면 다된다는 식으로 중국자본을 유입시킨 것으로, 이를 용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며 “정책을 폐기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 택배비 절감, 골목상권 살리기 등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으로 자본을 많이 끌어들였고, 제주 곳곳을 파헤쳤다. 이는 도민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선무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상 정치에 능한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지·송은범기자

쟁점

4·3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 놓고 격돌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과 함께 배·보상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격돌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4·3배보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정부입장도 설득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무소속 박희수 후보의 “배·보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보상 근거로 사법부를 설득하거나 행정부를 움직일만한 사실조사가 충분치 못하다”면서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민주당의 행태 때문”이라고 답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송 “21대 국회서 반드시 해결”
장 “무책임 민주당 행태 원인”
고 “집권당 의지부족서 비웃”
박 “여 무관심·야 이념공세 탓”

특히 장 후보는 송 후보가 안으로 제시한 일괄타결방식의 4·3 배보상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4·3 배보상을 약속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려놓고 있다”

면서 “문재인 정부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마무리 못한 것이 아니며, 이번 국회 말이나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야당이 작년 장외투쟁을 주로 하는 바람에 식물국회로 전락해서 특별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며 야당의 책임론을 꺼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집권여당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고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에서 개정안은 첫걸음에 불과한데 첫 걸음조차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당 대표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 못해서 통과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정과제라고 하지만 2·3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여당의 무관심, 야당이념공세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공격에 나섰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송 후보를 향해 “4·3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했느냐”고 물으며 “(그런 행동이) 진전이 없어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야당 탓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장 후보를 향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우선 기재부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치쟁점화 자체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은지·송은범기자

追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일 慕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

4월3일은 4·3희생자 추념일입니다.

- 올해 제72주년 4·3추념식은 “코로나19” 비상 사태로 대폭 축소하여 봉행합니다.
- 유족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추념식 참석 및 4·3평화공원 방문을 억제하여 주십시오.
- 올해 4·3추념일에는 각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목념 사이렌 울림 안내

- 4월3일 오전10시부터 1분간 목념사이렌이 울립니다.
- 유족 여러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4·3영령들을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추모관’ 운영 안내

- 제주도와 평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추모관’에 방문해 4·3영령들을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 ☎ (064) 724-4343~4

제주4·3희생자유족회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4·3 victims